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타다’ 1차 공판 “적법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

‘타다’ 불법성 여부 두고 의견 대립
이재웅 대표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검찰과 타다 측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타다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불법성을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맞붙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바이씨엔씨(VCNC) 대표 등 타다 운영자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타다는 렌터카의 운전자 앞 선 예외조항인 여객자동차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송 영업을 해왔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를 앞선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타다 이용자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등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우버 등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며 “위법성 인식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 등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민약 법률 규정에서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타다의 구체적인 영업방식, 타다 이용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지위 등을 근거로 타다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둔 렌터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사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 등의 변호인은 “이미 타다 전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것은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상에 근거를 둔 적법한 구조”라며 “타다는 (이용자가)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앞선다면, 기사가 차를 운전해서 이용자에게 가는 것이다. 종전 방식(기사 포함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다고 해서 법률상 렌터카를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변호인은 “타다에서는 자동차 임대계약, 용역계약, 용역알선 계약, 중계계약이 있고, 이용자는 약관을 보고 승인한다”며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타다 서비스가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록을 검토해보니 약관과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300조 퇴직연금 무한경쟁 증권사, 수수료 ↓ 수익률 ↑

신한금융, 업계 최저 0.43% 수준
실질적 수익률 제고, 고객관리

증권업계가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운용 수수료를 잇달아 인하하며 고객 유치에 나선 것.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공격적인 선언까지 나왔다.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자는 다음주 중 현재 0.43% 수준인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인하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 최저 수수료를 선언한 NH투자증권(0.40%)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미 사회공헌기업 수수료 50% 할인,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업계 최고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고객 퇴직연금 자산 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여”라고 밝혔다.

◆ 증권업계 수수료 ‘최저’ 전쟁

증권업계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퇴직연금 자산이 오는 2023년 300조원까지 커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금형퇴직연금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는 증권사가 미래 먹거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증권사 퇴직연금 수수료)

/각사,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50억원 미만 DB형 수수료율	최근 3년 DB형 수익률
KB증권	0.42%	1.94%
신한금융투자	0.43%	1.88%
삼성증권	0.41%	1.84%
미래에셋대우	0.45%	1.83%
한국투자증권	0.41%	1.78%
NH투자증권	0.40%	1.75%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DB형의 기본 수수료를 금액구간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수수료율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대 30%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또 퇴직연금 장기가입자를 위한 장기할인율도 최대 5%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10월 DB형에서 모든 적립금 평가액별 구간수수료율에 대해 평균 0.04%포인트(0.01~0.09%) 인하를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2017년부터 IRP 개인 납입금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증권업계 중 퇴직연금 자산(11조 8000억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증권 역시 수수료 인하대열에 합류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달 퇴직연금 수수료를 평균 0.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뒤이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적립금 50억 이하의 DB형의 경우 수수료율을 연 0.42%, 0.41%로 각각 0.08%포인트, 0.04%포인트씩 낮췄다.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저수준 수수료’를 선언했다. 50억원 이하 DB형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0.40%로 낮춘 것. 회사 측은 장기가입시(2년 이상) 적용되는

수수료 할인혜택의 비율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고 전했다.

◆ 연금관리 서비스도 강화

증권업계는 연금 서비스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단순 수수료율 인하를 벗어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와 고객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삼성증권은 올해 7월 말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IRP, 개인연금 등 연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3분 연금계좌’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후 비대면 계좌를 통해 유치한 IRP 계좌가 전년 대비 2배 급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9월부터 연금 본부 내에 별도의 ‘연금고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금본부 인력을 총원해 연금컨설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물론 개인연금 고객 관리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다.

KB증권은 자산관리 컨설팅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연금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감면하는 식의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199건 필리버스터’ 한국당 무리수 역풍

민생·경제·안전 등 모두 볼모로
‘한국당 해체 촉구’ 청원 올라와
“199번 봉쇄… 집단인질극”
다음 회기서 안전 상정·표결해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전략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체 촉구’는 나흘만에 5만 2000명을 돌파했고,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1순위에 올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앞에 설치한 ‘투쟁전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해 달라”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올라온 199개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신청한 안건에는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일부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술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 규명 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보장, 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거사법 같은 민생·경제·안전 법안이 담겼다.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임시국회를 최대 199번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인질극’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개 안건 모두를 수중에 넣고 여론을 살피면서 법안을 하나씩 풀어주는 전략으로 풀이한다.

실제 ‘무제한 토론’으로도 부르는 필리버스터는 시간갈기에 불과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로 지정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신속처리 안전(패스트 트랙)’ 지정안 5건은 3일 모두 본회의의 부의한다. 한국당 입장에선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올해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가 열리면 속수무책인 셈이다.

한국당은 무리수 전략을 내놓은 후 역풍을 맞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정국 때에 이어 또다시 한국당 해산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2일 오전 기준 5만 2293명이 동참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